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의 다각화 사례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 들어가며

성별영향평가제도가 추진된 지 20여 년이 지난 현재, 그간 성별영향평가제도가 가져 온 성과는 적지 않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대상 과제 수가 25,000개를 넘어섰고, 개선의견 수용률도 매해 증가하였으며, 중앙부처의 경우 정책 개선 이행률도 매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¹⁾ 제도적 측면에서도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를 마련해 왔는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운영 등이 있었다.²⁾ 이러한 양적·제도적 측면에서의 발전뿐만 아니라,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정책이 성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는 인식의 환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을 통해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 등 당초 성별영향평가제도가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를 향한 진전이 있었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성별영향평가제도가 그동안의 성과를 넘어 성 주류화 전략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과 접근이 필요하다. 제도가 운영되는 20여 년 동안 성별영향평가 제도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가며 발전해 왔으나, 여전히 제도의 내실화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성별영향평가제도가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런 측면에서 성별영향평가제도가 관성에서 벗어나

1) 2022년 기준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 수는 법령, 계획, 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27,109개였고, 개선의견 수용률은 85.5%였는데, 이 수치는 매해 증가한 수치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개선 이행률은 2020년 71.0%, 2021년 77.8%, 2022년 79.6%이다. 여성가족부(2021). 2020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2022).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2023).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2)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와 관련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100.0% 마련되었고, 기초자치단체는 98.7%, 교육청은 94.1% 마련되었다.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광역자치단체는 100.0%, 기초자치단체는 86.7%, 교육청은 88.0%가 구성을 완료하였다. 여성가족부(2023).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최근 몇 년 동안 성별영향평가제도를 다각화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들이 이루어졌다. 이 글에서는 성별영향평가 제도 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진 노력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다각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시범사업 추진 배경

그동안 양적·질적으로 발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영향평가제도는 늘 여러 도전 상황을 마주해 왔다. 우선 성별영향평가는 제도 도입 때부터 지금까지 제도의 필요성과 의미를 설명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는 성별영향평가제도가 정책과 젠더의 관계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을 전제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다시 말해 정책이 젠더와 무관하지 않고, 성차별적 구조와 인식이 정책을 기획, 실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차별적인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는 점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이 지점을 설명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였다. 제도가 운영되어 오는 과정에서 제도의 의미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이 제도가 왜 의미있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일반론적 차원에서 정책이 젠더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넘어 각 정책이 젠더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구성되어야 하고, 각 정책이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달성하고 지향해야 할 성평등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하기 때문이

다. 그래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는 데 있어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준거로 각 부처가 달성해야 하는 성평등 목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제시하기도 하였지만,³⁾ 각 부처의 주요 정책 의제가 성평등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요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제도의 효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상 과제 수의 확대나 정책 개선 이행률의 증가는 성과는 있지만, 제도의 양적 성과만으로 그 효과를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성별영향평가의 질적 성과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제안된 정책 개선안의 내용과 이를 통한 성평등 실현의 기여 정도, 정책 개선을 통한 국민 체감도 등을 의미한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 성과도 있었고 제도와 정책에 내재된 성차별적 요소 개선에 기여한 측면도 있으나, 성차별적 구조 전환이라는 목표 달성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제시되는 개선안에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찾기도 쉽지 않다. 새로운 개선안이 제안되지 못하는 것은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정책 개선을 위한 충분한 재정이 확보되지 못하고, 실행을 위한 체제도 충분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 탓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각 사업 또는 정책 의제와 관련한 성평등 목표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각 정책 영역 또는 의제의 성평등 관련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가 축적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제도의 운영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면서 제도 운영 절차에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현실적

3) 매해 발간되는 성별영향평가 지침에는 참고자료로 부처별 양성평등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총 다섯 개의 양성평등목표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피해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를 기준으로 각 부처가 해당 목표와 관련한 목표를 제시하였다.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표준화된 성별영향평가서는 정책 특성을 반영한 제도 운영을 제약하고, 나아가 성별영향평가가 각 사업과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며, 형식적인 보고서를 산출해 행정적 낭비를 초래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⁴⁾ 실제로 사업 특성에 따라 고려해야 할 지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표준화된 성별영향평가서 양식으로 인해 사업 특성과 사업 추진에서 고려되어야 할 지점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성평등의 의미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 다시 말해, 성평등이 단순히 수혜에서의 성별 균형만을 의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혜율 중심의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으로 인해 성평등의 의미가 수혜율 중심으로 제한되고, 수혜율의 성별 차이가 없으면 성불평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 것이다. 한편으로 해당 사업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젠더 이슈를 드러내기보다 사업과 관련한 일반적인 차원의 내용을 다루는 경향도 나타났다. 이 또한 각 사업과 관련한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이 충분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 결과이지만, 성별영향평가가 사업 특성, 구체적으로 사업 추진 기간, 대상, 내용, 추진체계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개선안 제시가 어렵고 사업에 대한 이해 없이 추진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책 영역의 특성을 고려한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위해 각 정책 영역에서 고려해

야 할 성별 특성을 분석·정리·제시하기도 하였고, 특정성별영향평가 등과 같이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 방식에 변화를 꾀하기도 했다. 기존에 시도한 노력들은 정책 영역이라는 큰 범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성별영향평가 기간과 분석의 주체를 다변화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이루어지는 한편, 좀 더 내실있는 성별영향평가 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되고 구체화된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의 변화가 필요하다. 관련하여 2021, 2022년 성별영향평가의 다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고,⁵⁾ 이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시범사업이 추진되었다. 다음에서는 2023년부터 추진된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시범사업인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와 협업형 성별영향평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3.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와 협업형 성별영향평가

가.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특성과 성평등 관련성을 고려한 성별영향평가 추진을 통해 성별영향평가를 내실화하고, 성별영향평가의 점검 항목을 간소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⁶⁾ 대상사업은 성평등 이슈가 명확하고 그동안 성별영향평가의 결과가 축적된 사업으로 선정하며, 2023년 추진된 시범사업에서는 일자리 사업 중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

4) 마경희·성민정·이은아·성경(2019). 성 주류화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5) 최유진·김희경·조영주·남궁윤영·김정수·이슬·남정연·임연규(2021). 중앙부처 및 지자체 성주류화제도 운영 모델 개발, 여성가족부; 최유진·김희경·조영주·남궁윤영·이태·김정수·이슬·남정연(2022). 성주류화제도 추진방식 다각화를 위한 운영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6) 여성가족부(2023). 2023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도서관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2024년에도 시범사업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상사업은 2023년과 동일하다.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그동안 축적된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사례를 유형화 및 지표화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기존의 정책 개선안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여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을 간소화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과 관련한 성평등 이슈를 가시적으로 보여 주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이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공무원의 피로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의 성평등 관련성을 좀 더 명시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을 추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사업의 대상, 주제, 재원 등 사업 성격, 사업 형태 등을 고려하여 유형화하였다. 사업을 살펴본 결과 정책 영역보다 사업의 추진 형태에서 차이가 있었기에 사업 추진 형태별 개선안을 살펴보고, 다시 개선안을 중심으로 유형화하였다.⁷⁾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일자리사업과 공공서비스사업 중 도서관사업을 선정하였다. 일자리사업은 성별 격차 해소라는 젠더 이슈가 명확하고 정책 개선안이 패턴화된 경향을 보였다. 도서관사업의 경우 사업과 관련한 상위 지침, 즉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 관련 지침이 있기 때문에 개선안이 제한적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고, 주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수혜자의 성별 현황 파악, 만족도 조사 및 반영, 종사자 대상 교육 실시 등의 내용으로 전형화되어 있었

다. 그래서 도서관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추진을 제안하였다.

일자리 분야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참여자의 성별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참여자의 자격 요건이 특정 성별을 배제하거나 소외시키지 않는지, 근로 환경이 안전하고 편의가 보장되는지를 중심으로 점검하였다. 일자리사업의 성평등 목표라 할 수 있는 성별 격차 해소의 차원에서 성별 격차를 야기하는 조건으로 참여자의 자격 요건을 주요하게 고려하여 체크포인트로 설정하였다. 도서관 사업의 경우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초점을 맞추었고,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지역의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지,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성별 균등한 참여가 보장되는지, 도서관 사업 참여에 신체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제약은 없는지를 점검하였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형태의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2023년 처음으로 시범사업 차원에서 추진되었는데, 시범사업 시작 시기나 시범사업에 대한 안내의 한계로 많은 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지지는 못하였다. 2023년에는 일자리 사업 1개, 도서관 사업 5개로, 총 6개 사업을 대상으로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였고, 사업 추진 이후 해당 사업의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한 공무원과 평가를 진행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개선안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 사업은 없었고, 제시된 개선안 중 추진 가능한 것을 선택하거나 ‘기타’의견에 추가 의견을 작성하여 지자체 상황에 맞는 개선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제출된 성별영향평가서는 컨설팅

7)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최유진 외(2022). 성주류화제도 추진방식 다각화를 위한 운영 방안 연구를 참조.

없이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검토하였는데, 전문가 검토 결과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개선안에 동의했고,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의견을 제안하였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성별영향평가서가 간소화되어서 작성이 용이했고, 정책 개선안이 제시되어 있어서 해당 사업을 성인지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파악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의견을 주었다. 이는 당초 자가진단형 성

별영향평가서 추진의 목적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23년 시범사업은 6개라는 매우 적은 숫자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 올해 추진되는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시범사업의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개선 방향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업명) 사업 성별영향평가		구분	점검 결과
수혜자 현황 점검	사업참여자 지원지력	■ 수혜자의 성별 격차는 _____%이다.	<input type="checkbox"/> 여성남성 <input type="checkbox"/> 남성여성
		■ 사업 참여를 위한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사업 지침 및 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것 제외함)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제시하시오. (※중복 체크 가능)	<input type="checkbox"/> 관련 분야 전공자 <input type="checkbox"/> 관련 분야 종사 경험 <input type="checkbox"/> 관련 분야 자격증 <input type="checkbox"/> 관련 분야 양성과정, 전문과정 등 교육 이수자 <input type="checkbox"/> 관련 분야 수행을 위한 기기 활용 가능(예: GPS 등) <input type="checkbox"/> 자차 이용 또는 운전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관련 분야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input type="checkbox"/> 특별한 자격요건 없음
		- 이 사업의 자격요건은 특정 성별의 사업 참여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잘 모르겠음
		- 예라고 응답한 경우, 어떤 요건이 참여를 어렵게 합니까?	<input type="checkbox"/> 관련 분야 전공자 <input type="checkbox"/> 관련 분야 종사 경험 <input type="checkbox"/> 관련 분야 자격증 <input type="checkbox"/> 관련 분야 양성과정, 전문과정 등 교육 이수자 <input type="checkbox"/> 관련 분야 수행을 위한 기기 활용 가능(예: GPS 등) <input type="checkbox"/> 자차 이용 또는 운전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사업참여 기회보장	■ 지역의 고용서비스기관에 관련 분야 직업훈련이나 양성과정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사업 추진 과정에 지원자격 획득이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근로환경	■ 출퇴근이나 업무 수행을 위해 자차(자가용 등)가 필요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근무에 필요한 안전복이나 복장, 신발 제공 시 신체적 차이를 고려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사업명) 사업 성별영향평가		구분	점검 결과
개선 계획	■ 향후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 어떤 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까? (※중복 체크 가능)	■ 근무에 필요한 장비, 도구를 제공할 때 신체적 차이를 고려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 근무 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공용 화장실이 있음 <input type="checkbox"/> 성별로 구분하여 마련되어 있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시설이 필요하나 마련되어 있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시설이 필요없음
		■ 근무 시 이용할 수 있는 대기 또는 휴게 공간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공용 시설이 있음 <input type="checkbox"/> 성별로 구분하여 마련되어 있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시설이 필요하나 마련되어 있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시설이 필요없음
개선 계획	■ 사업 참여자의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 사업 지침에서 수정 또는 변경되었으면 하는 부분이나 사업 수행과 관련한 개선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주시시오.	■ 출퇴근 시 우선선발 기준 명시(참여요류 비율 명시 등) ■ 특정 성별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및 선발 조건 완화 ■ 지원자격 획득이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input type="checkbox"/> 관련 분야 직업훈련 마련을 위해 지역 내 고용서비스기관과 협의 <input type="checkbox"/> 출퇴근 또는 업무수행을 위한 이동 및 교통 지원 방안 마련 <input type="checkbox"/> 화장실, 휴게 또는 대기 공간 등을 성별로 구분하여 마련 <input type="checkbox"/> 기타(직접 기술: _____) <input type="checkbox"/> 없음(없음 이유: _____)	

[그림 1] 일자리사업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서의 주요 지표

나. 협업형 성별영향평가

지방자치단체 협업형 성별영향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주체가 협업하여 지역의 주요 사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민 참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성평등정책

부서 및 성별영향평가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 있는 사업에 대해 성주류화 추진단을 구성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형태이다.⁸⁾ 협업형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지역의 성평등 실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 성평등 이슈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면서

8) 여성가족부(2023). 2023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성별영향평가의 내실화 도모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며,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의 성별영향평가제도와 성평등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2023년에 추진한 협업형 성별영향평가는 파주시의 대중교통 노선 개편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해당 지자체와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2021년부터 파주시 성평등정책 전담인력 젠더전문위원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다각화를 위해 여러 형태의 협업을 추진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파주시 사업 중 대중교통 노선 사업을 선정한 이유는 파주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면서 주민들 역시 해당 사업에 대한 요구가 있고, 파주시가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파주시 대중교통 노선 개편사업은 파주시장의 공약사업으로, 파주시의 지리적 특성과 교통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성평등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교통 접근성은 자유로운 이동과 안전, 경제활동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데, 파주시의 경우 교통접근성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고, 이는 구직활동과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2019년 파주시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이 구직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출퇴근 거리, 시간 등 교통 문제'를 꼽은 경우가 여성 10.1%, 남성 5.7%로 성별 격차가 4.4%였고, 특히 경력단절여성은 '출퇴근 거리, 시간 등 교통문제'의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3.8%였다. 만족도 측면에서도 2019년 파주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의 불만족도가 지하철·경전철, 기차, 택시, 버스에서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여성이 81.9%, 남성이 68.7%로 여성 이용률이 높는데, 여성의 불만족도도 높다는 것은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 여성이 더 불편하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파주시의 경우 대중교통과 관련한 사업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매우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파주시 경제활동에서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협업형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파주시에서 대중교통 노선 개편을 기획하는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협업형 성별영향평가 추진을 통해 도출하고자 하는 결과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면서 최종 결과로 제출할 내용이 추가되었다. 협업형 성별영향평가를 기획할 당시에는 파주시 여성의 이동성 제고를 위해 노선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이 주였는데, 그 외에도 파주시에서 요구한 대중교통 관련 시설에 대한 개선의견도 포함하였다.

방향성 설정 이후 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였고, 파주시의 주요 사업 추진 내용과 방법인 시민소통과 빅데이터 분석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다. 시민소통 차원에서는 의견 수렴 내용과 방식을 기획하고 분석하는 과정에 젠더 전문가가 참여하고, 여성 시민의 참여 공간을 마련하도록 계획했다. 빅데이터 분석 차원에서는 분석할 빅데이터를 선정하는 과정과 분석에 참여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빅데이터 분석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해 성별을 변수로 추출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분석이 추진되지는 못하였다. 시민소통 차원에서는 파주시에서 대중교통 모니터링단을 모집하였고, 모니터링단이 파주시 버스정류장 실태와 파주시민 버스 이용에 대한 인터뷰 등을 담당하였다. 모니터링단은 총 10명(여성 9명, 남성 1명)이 활동하였

는데, 사전 교육 차원에서 이동과 젠더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고 구체적인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였다. 모니터링을 위해 우선적으로 파주시를 남부와 북부로 구분하고, 북부에서도 대중교통 노선을 중심으로 구획하고 각 지역을 할당하여 모니터링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버스정류장 모니터링은 정보제공 수준, 배차간격, 안전을 주요 내용으로 살펴보고,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의 이용 목적, 주 이용 노선과 목적지,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 등을 인터뷰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파주시 북부와 남부의 인프라 격차가 컸고, 이용에 있어서 수요도 다르게 나타났다. 북부의 경우 인구의 다수가 고령이고, 남부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았다. 그렇기 때문에 북부에 거주하는 여성은 의료접근성에 대한 요구가 컸고, 남부는 경제활동과 관련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북부 지역의 경우 생활 인프라 부족과 불편한 교통 접근성이 중첩되어 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었고, 남부는 파주시 내 일자리나 파주시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시간의 단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파주시와 추진한 협업형 성별영향평가는 모니터링 이후 아직 개선안을 제출하고 협의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추후 시범사업을 마무리한 다음 담당부서 및 여성정책과와 협의하여 노선 개편에 대한 협의와 시설 개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4. 나오며

2023년에 시작한 시범사업은 성별영향평가제도 발전을 위한 여러 연구들을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⁹⁾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영역의 특성을 고려한 성별영향평가 추진의 방향을 설정하는 등 제도 운영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성별영향평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꾸준히 이루어져 온 것이다. 그리고 20여 년 동안 축적된 성별영향평가의 성과도 제도 개선 시도를 가능하게 한 기반이었다.

이 글에서 다룬 지방자치단체의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와 협업형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를 다각화하는 방안 중 일부이다. 최근 새로운 정책 의제의 등장, 정책의 기획과 실행이 단일 부처에 국한되지 않는 상황, 정책 대상이나 내용의 복잡·다차원적 성격 등 정책과 성별영향평가를 둘러싼 환경은 과거와 다르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별영향평가가 실질적 성평등에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성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노력과 그 일환인 시범사업이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새로운 도전이 되기를 기대한다.

9) 김경희·마경희·김둘순·남궁윤영·이은아(2015). 성평등 향상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가이드 개발. 여성가족부; 마경희·성민정·이은아·성경(2019). 성 주류화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참고문헌 •

- 김경희·마경희·김들순·남궁윤영·이은아(2015). 성평등 향상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가이드 개발. 여성가족부.
- 마경희·성민정·이은아·성경(2019). 성 주류화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21). 2020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2022).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2023).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2023). 2023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 최유진·김희경·조영주·남궁윤영·김정수·이슬·남정연·임연규(2021). 중앙부처 및 지자체 성주류화제도 운영모델 개발. 여성가족부.
- 최유진·김희경·조영주·남궁윤영·이태·김정수·이슬·남정연(2022). 성주류화제도 추진방식 다각화를 위한 운영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